

참여정부 2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2005. 3. 3

國 務 調 整 室

-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177개의 핵심공약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추진 되어 참여정부 국정이념의 실현과 개혁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입법추진 지연, 사회적 합의 미흡 등으로 일부 추진이 부진한 과제들도 지적되었음
- 앞으로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하여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

- 목 차 -

I. 점검추진 개요	1
II. 점검결과 종합	2
III. 사례별 분석	4
IV. 향후 조치계획	10

- 【별첨】 1. 핵심공약 추진상황 총괄표
2. 4대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 현황

I . 점검추진 개요

□ 공약 관리 현황

- 총1,347건의 공약중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177개의 핵심공약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관리
 - 핵심공약 이외 정치관련 공약(14건)은 대통령비서실 관리, 중점(553) · 일반공약(602건)은 부처 자체관리
 - ※ '03년 7월 부처의 핵심공약 추진계획을 취합 대통령님께 보고
- 국무조정실은 공약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초 부처 추진실적을 종합점검
 - '04년 3월 참여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핵심공약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청와대 정책실에 보고
 - ※ 177개 공약 중 완료 33개, 정상추진 130(추가보완 31개 포함), 부진 14개

□ 중점 점검 내용

- '04년 3월 이후부터 '05년 1월말까지 177개 핵심공약에 대해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별로 추진상황 점검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분류(177건)
1. 경제(48)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14)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17)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13)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4)
2. 사회·문화·여성(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16)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14)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31)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5)
3. 정치·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25)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21)
4. 외교·통일·국방(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7)

- 목표 달성도, 추진내용의 충실성, 조치시한에 따른 추진진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을 집중점검

Ⅱ. 점검결과 종합

1.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 핵심공약 177건중 대부분의 과제(167건, 94.4%)가 완료(53건) 또는 정상추진(114건)중에 있으며, '04년에 비해 완료과제는 증가(20건)하고 부진과제는 감소(4건)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중	추가보완필요	
'05. 2월	53건	109건	5건	10건
'04. 2월	33건	99건	31건	14건
증 감	20	10	△26	△4

- 특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통합도산법), FTA이행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주민투표제 등은 참여정부의 개혁성과를 가시화하는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 다만, 입법추진 지연(5건), 사회적 합의 미흡(1건), 추진계획 이행 미흡(1건), 기타(3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10건(5.6%)이며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여 부진으로 지적된 과제도 7건임
 -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별검사제, 재정건전화법, 의료분쟁조정법,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복핵문제 해결 등

□ 또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44건, 조치시한 조정이 필요한 과제도 27건으로 파악됨

※ 예시) 조치시한 조정 필요과제

- ▶ 계속사업 필요과제(11건) :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04상 ⇒계속으로 조정) 등
- ▶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과제(16건) :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03하 ⇒'07상으로 조정) 등

2. 분야별 추진상황

- 경제와 정치·행정분야가 완료과제의 62%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문화·여성분야와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사회갈등현안 및 북핵문제 등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함

4대 분야별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중	추가보완필요	
경제	48	16	31	1	0
사회·문화·여성	66	20	38	4	4
정치·행정	46	17	26	0	3
외교·통일·국방	17	0	14	0	3
합 계	177건	53건	109건	5건	10건

※ 4대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현황 별첨 : 【별첨2】

- 경제분야는 FTA 이행특별법('04.3), 농촌복지특별법('03.12) 제정, 통합도산법 제정('05.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03.12),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05.3) 도입 등 농어촌 및 경제개혁부문에서 성과
- 정치·행정분야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05.3.2),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1), 지방분권특별법('04.1), 주민투표법 제정('04.1)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부문에서 상당한 성과
- 사회·문화·여성분야는 호주제 폐지, 주 5일제 실시,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의료분쟁법 제정 등 사회갈등 현안이 다수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외교·안보·통일분야는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북핵 등의 과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핵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따라 일관되게 대처중

Ⅲ. 사례별 분석

1. 추진실적 우수 사례(6)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 현재의 위헌결정('04.10.21)에 따라 신행정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04.11.18)하여 행정중심도시 등 3대 대안을 선정, 후속대책 마련
- 국회에서도 후속대책특위를 구성('04.12.23), 자족성을 갖춘 행정·다기능 복합도시 건설, '05. 2월 특별법 처리 등 주요원칙에 합의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도시건설특별법' 국회통과('05.3.2)

□ 통합도산법 제정(법무부)

- 기존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으로 분산된 기업정리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통합도산법안 국회제출('03.2.21)
- 이중 기업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 부분의 '개인채무자회생법'(법제사법위원회 대안) 국회 통과('04.3.2)
- 파산과 면책 동시 추진, 면책 결정까지 가압류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명 통합도산법) 국회통과('05.3.2)

□ 호주제 폐지(법무부, 여성부)

-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04.6.4) 및 법사위 통과('04.12.27)
-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05.2.3)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05.3.2)

□ FTA 이행 특별법 제정(농림부)

- FTA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특세 연장 등 농어촌 지원 관련법과 한·칠레 FTA체결 국회비준을 연계 추진
- 대통령님과 농민단체대표들 회담, 농·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농민단체, 국회 등에 대해 범정부적 설득 노력을 통한 합의 도출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공포('04.3.22)

□ 주민투표제 도입(행자부)

-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 저해, 지방의회기능 약화 등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 주민투표 제외대상 규정, 엄격한 청구요건 설정 등 다각적인 남용방지 장치 마련
- 주민투표법 공포·시행('04.1.29, 7.30) 및 지자체별로 주민투표조례 완료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환경부)

- 산업경쟁력 저하 등 산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을 법률안 입안·검토·조정예 참여시키는 한편
 - 190회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부처설명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국회통과('03.12.31), 동법 시행령('04.12.14) 제정

2. 추진이 부진한 사례(7)

① 입법조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례(5)

□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예산처)

- 정부는(예산처와 재경부 공동)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 국가재정건전화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04. 10) 하였으나
 - ※ 주요내용 :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재정건전화장 신설)
 - 야당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대응 제출('04.12)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심의할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
 - 국가채무에 준정부공공기관의 채무 포함 여부, 세계잉여금의 추정 활용 제한 등에 대해 여야 이견 (現 운영위 회부)
- ⇒ 법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야협의 강화 등 대국회 설득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 조속추진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복지부)

-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 관계부처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의 위헌 소지(법무부) 및 정부예산 부담(예산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의 지연
 - ※ 16대 국회(이원영 의원)의 의원입법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 17대 국회(이기우 의원)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을 '05년 4월 의원입법 재추진중
- ⇒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 수렴 및 당정협의 강화 등 대국회 노력을 경주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법무부·부방위)

-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 야당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독립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 입장 견지(現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

⇒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협의, 여야협력 강화 추진 등 소관 부처 특단의 대국회 활동 노력 필요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교육부)

-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국회 제출('04.10)
 - ※ 주요내용 : 사학의 자율성 확대, 책임성 강화, 사학비리 예방 등
- 야당, 교원·시민단체 및 사학경영자단체간의 이해대립으로 국회처리과정에서 지연(現 교육위 계류중)
 -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05.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함

※ 이견내용

- 사학법인연합회, 야당 등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사학 자율성 침해, 법인의 기본권 박탈, 건학정신 구현 저해라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개정안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 도출 및 대국회 설득 노력 경주

※ 당초 조치시한('04하)을 조정('05하)하여 사학법 개정 추진

②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례(1)

□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복지부)

-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 제출중('04.6.2)이나,
 - ※ 보험료율(9%→'30년 15.9%로 인상), 급여수준(60%→'08년 50%로 인하)
 - 노동계(현행 60%유지)와 사용자 단체(40%로 인하)간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대립이 지속
 -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연금제 도입 등 연금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논란
- ⇒ 법개정 지연에 따른 연금 재정고갈 가속화, 후세대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대국회·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 마련 필요

③ 추진계획 이행이 부진한 사례(1)

□ 40세이상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복지부)

- 현재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및 보건소 만성질환사업 지원('05년 5억원)등을 시행중이나 국가차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당초 「국가만성관리법」 제정('04상)을 추진하였으나,
 - 음주·흡연 등 만성질환의 주요 예방관리 대상이 「국민건강증진법」 관리대상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법제정 필요성 여부 전면 재검토중
- ⇒ 법제정 여부에 대한 조속한 방향 확정 및 국가차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추진 필요

3. 추가보완 및 조치시한 조정이 필요한 사례(2)

① 추진계획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례(1)

□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교육부)

- 재경부 등 8개 부처 및 시민단체, 경제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범정부적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안을 수립 국무 회의에 보고('04.4.6)

※ 대학 서열구조 개선 및 지방대 육성, 공공·민간분야 능력중심 인사 관리 시스템 정착,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등 학벌관련 차별해소 등 4대분야 18개 과제를 추진중

- '04년 하반기 정부업무 평가시 목표의 계량화 및 성과측정에 대한 지표개발이 미진하여 전반적으로 국민의 체감도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과제수행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마련,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 확보 필요

② 조치시한 조정이 필요한 사례(1)

□ 산별 교섭의 효율적 정착(노동부)

-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자율에 의해 교섭방식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섭문화 정착
- 노동계는 근로조건격차해소 등을 위해 산별교섭의 법적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개별기업의 특수성 반영 곤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지속

⇒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분위기 조성 및 산별노조 운영과 관련한 법령정비 추진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해 조치시한 연장('03하→'07상) 필요

IV. 향후 조치계획

□ 향후 핵심공약 관리 및 점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 효율적인 공약관리방안 마련
 - 완료과제는 부처 추진실적을 면밀히 확인·검토후 관리종결하고, 로드맵 중복과제는 소관 국정과제위원회로 이관하되 추진결과는 관리하며, 나머지 과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관리
- 금번 종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약 실천계획 변경·보완 및 조치시한 도과과제에 대한 조정 등 후속조치 추진

□ 부진 또는 보완필요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각부처, 국무조정실)

- 각부처는 부진과제에 대해 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계획을 다음 분기실적 보고서 함께 제출
 - ※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으로 평가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특단의 추진대책 마련 및 이행노력 촉구
- 이해 집단간·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주무부처 주관으로 적극 노력하되,
 - 부처간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 조정
- 재정수반공약은 각부처가 재원조달방안 등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총액자율편성제도에 따라 부처 예산에 적극 반영
 - 대규모·장기 예산수반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 조치

【별첨1】

핵심공약 추진상황 총괄표

1.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경제)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07하	
2. R&D 예산 지속 확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07하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07하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상추진	계속	
5. 세계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	산자부,정통부	정상추진	'07하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8. 차세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통부,산자부	정상추진	'04상	○
9.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06하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육성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상추진	계속	
11.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과학기술부	완료	'03하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단축	과학기술부	완료	'03하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과기부	완료	'03상	
14. 이공계대학교육및연구지원법 제정	과기부	완료	'03하	
15.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노동부,교육부	정상추진	'07하	
16. R&D 특구 지정·육성	과기부	정상추진	'07하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특허청	정상추진	'07하	

2.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사회)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8.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05상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부	정상추진	'08하	
2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 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교육부	완료	'04하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교육부	완료	'03상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 행정개혁	교육부	정상추진	'04하	○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교육부	정상추진	'07하	
24.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	부진	'04하	○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25.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05상	
26.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부	정상추진	'05상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05상	
28.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문화재청	정상추진	계속	
29.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광부	완료	'03. 7월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성	문광부, 정통부 방송위	추가보완	'07하	
31.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광부, 정통부 방송위	추가보완	'07하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정상추진	'07하	
33. 정보격차 해소	정통부	정상추진	계속	

3.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사회·문화)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34. 자영업자 소득과약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복지부	완료	'03하	
35.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실시	여성부, 노동부	정상추진	'06하	
36. 차별시정 국가실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정상추진	'03하	○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추진	'04상	○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교육부	추가보완	03하	○
39. 사회적차별금지및시행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상추진	03하	○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법무부	완료	'03상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7상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 명시(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법무부	정상추진	'04상	○
43. 호주제 폐지	법무부, 여성부	완료	'04상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 노동부, 중기청	정상추진	'07하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노동부, 여성부	정상추진	'07하	
46.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여성부, 법무부	완료	03하	
47. 성매매 방지법 제정	여성부, 법무부	완료	'04하	

4.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경제)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48.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해수부, 정통부, 관세청, 방송위	정상추진	계속	
50. 동북아 경제협업체 구성	외교부,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	해수부	정상추진	계속	
53. 항만공사법 제정	해수부	완료	'03상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해수부	완료	'04상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6.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육성	재경부	정상추진	'07하	
57.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8.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59.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정상추진	'07하	
60.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건교부,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5.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경제)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61. FTA 이행특별법 제정추진	농림부	완료	'03하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복지부,농림부	완료	'03하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복지부,농림부	완료	'04상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	농림부,해수부	완료	'04하	

6.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행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65. 소득과약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국세청	정상추진	'05상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	정상추진	'07하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감사원	완료	'03상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조기구축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69. 소방 방재청 신설	행자부	완료	'03하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무부,부방위	부진	'04상	○
71. 공직사회 비리척결	법무부,행자부 부방위,감사원	정상추진	계속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중앙인사위	정상추진	계속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법무부	정상추진	'03하	○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법무부,재경부	정상추진	'07하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07하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법무부	부진	'03하	○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복지부, 식약청	정상추진	'05하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식약청,복지부	정상추진	'04하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 체계 도입	식약청	정상추진	'05하	
80. 재정건전화법 제정	예산처	부진	'03하	○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정통부,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법무부	완료	'03하	
84. 각 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 기준 마련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상추진	'04하	○
86. 우수인재풀의 극대화	중앙인사위	완료	'04상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중앙인사위 행자부	완료	'04하	
88.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예산처	완료	'04하	
89.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정상추진	'04하	○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사회)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9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노동부	정상추진	'04하	○
91.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노동부	완료	'03하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노동부	추가보완	'03하	○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부	완료	'03하	
94.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	재경부, 중기청, 노동부	완료	'03하	

8.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95. 언론산업 선진화	문광부	정상추진	계속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공정위	정상추진	'03상	○
97.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	재경부, 법무부	완료	'03하	
98. 통합도산법 제정	법무부	완료	'03하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재경부, 공정위	완료	'04하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재경부, 공정위	추가보완	'04하	○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재경부, 금감위	완료	'04상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공정위	정상추진	'03하	○
105. 과도한 집대비 지출 관행 개선	국세청	완료	'03하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	재경부	완료	'03하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 총액제한 제도 유지	공정위	정상추진	계속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재경부	정상추진	'07하	

9.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행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09. 호남고속철도 신설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1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 추진 기구 설치	건교부	완료	'03상	
111.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후속기획단	정상추진	계속	
112.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11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114.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교육부	완료	'04상	
115.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교육부	완료	'03하	
11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	재경부, 행자부	정상추진	'05하	
117.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행자부	완료	'04하	
118.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수확충	행자부	정상추진	'07하	
11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행자부	완료	'04하	
120.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	행자부	완료	'04하	
121. 자치경찰제 도입	행자부, 경찰청	정상추진	'05하	
122. 주민소환제 도입	행자부	정상추진	'05하	
123. 주민투표제 도입	행자부	완료	'05하	
12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행자부	완료	'03하	
125.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	건교부	완료	'04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산자부,예산처	완료	'03하	
1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예산처	완료	'03하	
128. 기업 지방이전 촉진	건교부,산자부	정상추진	계속	
129.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산자부	정상추진	'07하	

10.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30.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건교부	완료	'03하	
131. 250만개 일자리창출	노동부	정상추진	'07하	
132.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복지부	부진	계속	
133.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	복지부	완료	'04상	
134.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복지부	정상추진	'06하	
135.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복지부	완료	'03하	
136.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복지부	완료	'04하	
137.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복지부	정상추진	'06상	
138.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복지부	완료	'04상	
139.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복지부	정상추진	'04상	○
140.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복지부	완료	'04상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41.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2.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3.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복지부	부진	'03하	○
145.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여성부	정상추진	'07하	
14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복지부	정상추진	'05하	
147.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복지부	부진	'04상	○
148.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4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복지부	정상추진	'04하	○
150.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 대책기구 설치	복지부	완료	'03하	
151. 만 5세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교육부,여성부	정상추진	'07하	
152.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 서비스 확충	교육부,복지부	정상추진	'04상	○
15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54. 차상위계층(의료급여)시행	복지부	정상추진	'07하	
155.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천	복지부	완료	'03하	
156. 투기수요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건교부	정상추진	계속	
157. 주택자금 지원 강화	건교부,재경부	정상추진	계속	
158. 주택공급 확대	건교부	정상추진	'07하	
159.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 기반 구축	환경부	정상추진	'06하	
160. 지속가능발전위 위상강화	환경부	완료	'03하	

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제 명	주관부처	추진상황	조치시한	시한조정
161.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 교류 확대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62. 개성공단 건설 실현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63.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통일부	부진	'04하	○
164.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5.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6.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8.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통일부	정상추진	'07하	
169.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	통일부, 방송위	정상추진	'07하	
170.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	통일부, 방송위	정상추진	'07하	
171.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 상호간 신뢰증진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72.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통일부	정상추진	계속	
173. 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법무부,외교부	정상추진	'07하	
174.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통일부,국방부	정상추진	계속	
175.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	통일부,외교부	부진	'03하	○
176. 북한 핵문제 해결	통일부,외교부	부진	'03하	○
177.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	외교부,통일부	정상추진	'07하	

【별첨2】

4대분야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 현황

분 야	12대 국정과제	계	추진현황			
			완료	정상		부진
				추진	보완	
1. 경제 (48)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	6	7	1	0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	13	2	11	0	0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7	4	13	0	0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	4	0	0	0
	계	48	16	31	1	0
2. 사회 문화 여성 (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6	3	10	2	1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31	9	19	0	3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4	5	8	1	0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5	3	1	1	0
	계	66	20	38	4	4
3. 정치 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25	6	16	0	3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21	11	10	0	0
	계	46	17	26	0	3
4. 외교 통일 국방 (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7	0	14	0	3
	계	17	0	14	0	3
총 계		177	53	109	5	10

<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정책관리심의관실	
연락처	02- 725 - 5235 (policymgmt@opc.go.kr)